

국민건강을 위한 한 걸음! 담배소송 승소로부터

기고

이재태

전남도의원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다수 사람들은 흡연에 노출된 채 소중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수는 2019년 기준, 5만8036명에 달하며, 그들이 내뿜는 담배 연기 등 간접흡연까지 포함한다면 사회 경제적 손실은 추산할 수 없을 정도이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선택의 문제로 쉽게 접근하기에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매년 수많은 국민이 직·간접적인 흡연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7조 3758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을 상

대로 손해배상 청구(약 533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20년 11월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건강보험공단은 바로 항소심을 제기했다. 오는 22일이면, 12차 변론을 끝으로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직접흡연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흡연은 폐암·후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과 담배의 유해성 등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20갑년(하루에 담배 1갑씩 20년간 피운 경우) 이상 흡연자의 소세포암 발생 97%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됐다.

그럼에도 법원은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항소심은 △제조물책임·일반불법행위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인과관계 △직접청구 등으로 나뉘진행되고 있다.

특히, 담배회사가 담배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대체설계가 가능함에도 채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타르, 마일드 등 담

배가 덜 해로운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담배소송은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담배의 위험성을 사회에 알리고 모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담배로 인한 치료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쟁점사항이 될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흡연과 관련된 질환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담배소송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건강검진학회, 대한비만학회, 예방의학회, 대한간학회, 대한내과학회 등에서도 흡연이 미치는 건강 악영향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담배소송 항소심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담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일은 공단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의담배소송의 결과는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0여 년간 공단의 힘겨운 발걸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응원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오른쪽)가 13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 8회 말 3점 홈런(시즌 5호)을 친 뒤 홈에 들어와 축하를 받고 있다. 이정후는 5타수 2안타(1홈런) 3타점 1득점 1볼넷으로 활약했고 팀은 10-6으로 승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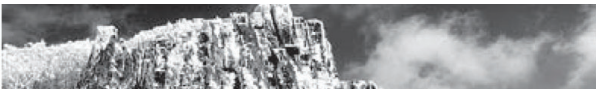
연합뉴스

서석대

누가 리더(지도자)인가. 어떤 자질을 가졌는가. 변함없이 존경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6·3대선을 앞두고 문득 떠오른 질문이다. 역대 위대한 지도자들은 공통점이 있다. 재임때나 사후에도 존경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념이나 지역, 세대, 계층을 떠나 국민은 물론 세계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있다. 그들의 업적 뒤에는 뛰어난 리더십이 있다. 상대를 포용하고, 소통, 공감하는 능력이다. 관대함과 겸손함, 화합하고 타협할 줄 아는 협치의 기술을 가졌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타협의 달인이었다. 노예제 폐지가 그냥 이뤄진게 아니다. 끊임없이 상대 당과 소통했다. 국민분열을 막기 위해 반대 세력을 껴안았다. 신념은 지키되, 포용과 통합을 잃지 않았다. 스웨덴의 타계 열란데르 총리는 협치의 정치인이다. 1946년부터 11차례 선거 승리를 통해 23년간 총리를 지냈다. 취임 초, 국민들은 좌우로 나뉘었다. 그는 반대 진영과 대화하고 타협했다. 야당 정치인들을 내각에 참여시켰다. 극심한 노사분규는 '목요회의'로 풀려갔다. 매주 목요일 저녁식사에 노사, 이해당사자들을 초대해 머리를 맞댔다. 대화가 잦고 깊어질수록 상생의 길이 열렸다. 그가 68세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국민행복지수 최상위의 복지국가 스웨덴은 그렇게 완성됐다.

왜 리더인가?



통합과 용서는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다.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1990년 대초 인종차별 정책의 희생양이었다. 27년간 복역하며 고초를 겪었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오히려 백인사회를 포용했다. 대표적인 게 '백인들의 스포츠'라며 흑인들이 반대하던 럭비 월드컵 유치였다. 최약체로 평가받던 남아공은 그해(1995년) 기적처럼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흑인과 백인 국민 모두 부둥켜 안고 올렸다. 인종갈등으로 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남아공을 뚝뚝 뭉치게 했다.

우리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다. 그는 '인동초'(忍冬草) 같은 삶을 살았다. 5번의 죽을 고비와 7번에 걸친 6년의 투옥, 55차례 가택연금을 당했다. 온갖 정치역경과 고초에도 그는 정적을 끌어안았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압축되는 정치철학은 지금도 후배 정치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리더(leader)의 어원에는 '앞에서 먼저 바람을 맞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무리의 맨 위에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 희생과 배려로 무리를 이끄는 안내자라는 의미로 들린다. 오는 6월3일 대선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된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란다. "내가 리더인가"를 되물으면서...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社說

‘징계·구속’ 의원 의정비 지급 중단해야

무죄 추정 원칙과는 별개 문제

전라남도 일부 기초의회가 공소 제기 이후 구속되거나 징계 중인 의원에게 여전히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신안·장성·구례·담양·고흥·영광군의회 등은 의원이 실질적 의정활동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명백한 혈세 낭비이자 제도적 허점이다.

지방의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지역 유권자들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따른 보상이다. 그러나 범죄 혐의로 구속돼 회의 참석은 물론, 민원처리와 정책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의 의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는 공무원의 징계 정직·휴직 중 보수 지급이 제한되는 것과도 상충된다. 순천시의회는 지난달 조례를 개정해 구속된 의원에게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했다. 공소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활동 중단 상태를 감안한 합리적 조치로, 타 시·군에도 모범이 될 수 있다.

반면 상당수 의회는 '무죄 확정 시 소급 지급' 조항을 이유로 구속 상태에서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는 별개의 문제다.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기간에 대가성 예산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만약 무죄 판결이 난다면 그 시점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면 될 일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공적 신뢰는 엄정한 책임성과 윤리 기준에서 비롯된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특권을 누리는 일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더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회 자율의 원칙 아래 지방의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책임은 크고 기준은 엄격해야 한다.

전남 각 시·군의회는 하루빨리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 구속·징계 등으로 의정활동이 정지된 의원에게 수당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확히 두고, 무죄 확정 시 소급 지급의 형평성도 함께 보완해야 한다. 유권자의 혈세로 운영되는 의회가 책임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려면, 최소한의 상식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수산업 명운 달린 전남 연안어장 재배치

과학적 준비·지원 등도 필요해

전라남도가 밀집된 바다 양식장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연안어장 재배치에 나섰다. 밀집된 연안의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어장환경 변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구촌 과제다. 이번 재배치가 막힌 바닷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양식장과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전남의 해면(바다) 양식장 면적은 12만 516ha로, 전국 7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의 거점기지인 셈이다. 하지만 양식장이 밀집되면서 어장환경 악화와 생산성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당장 밀집된 양식장은 해수 유통을 방해하고, 폐기물이 축적돼 적조와 질병 확산, 생물 다양성 감소로 이어진다. 낙후된 시설과 비효율적 관리는 생산성 하락도가 저온다. 전남도도 지속적인 연안어장 재배치가 해양오염 방지와 질병 예방

을 넘어 어장 생산성 회복과 어장질서 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온상승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한반도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60여 년간 1.4도 가량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역대급' 더위가 찾아오면서 어업 분야에 엄청난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업·양식 생산 제도와 시스템 유연화,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 시스템 강화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험형 양식장 등 관광을 연계한 어장을 개발할 경우 사회·경제적 효율도 높일 수 있다.

전남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수온과 염분, 유속 등 해양 환경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해 과학적인 재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어업인과 주민, 환경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함께 어장 재배치에 따른 피해 어민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